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

제안 설명

교통위원회 박중화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박중화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

최근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불량 생활용품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으로 인해 큰 비용부담을 강요받고 있어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상 및 보상 관리를 강화해야 하지만, 의류만을 예로 들더라도 국가통합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~30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이 법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

수 있습니다.

따라서, 의류, 시계, 한복과 공예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해 줄 것과 궁극적으로는 동 법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건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